



[금융] 4대 금융그룹 고배당정책 논란 04



Economy

코스피	2179.49 (+3.38)	코스닥	753.13 (+4.77)
금리 (2년 기준)	1.80 (0.00)	환율 (원/달러)	1132.10 (-5.20) (18일)

‘조세저항’ 반발 속 “공정과세” 의견도… 나눠진 국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시가격 현실화

주택소유자
보유세 부담에 불합리 호소 1주택자 예외 등 조정 요청

정부·무주택자
투기근절 위해 인상 불가피 조세정의·공정과세에 부합

공시가격 현실화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극명히 나뉘고 있다. 주택소유자들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에 불합리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야당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반면 정부와 무주택자들은 ‘조세 정의’를 위해 공시가격 인상(현실화)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향후 관련 논쟁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쪽의 입장은 물론 집을 있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세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 청원하고 법안 만들고… 반발 18일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 발표 이후 곳곳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을 통해 전국 공시가격은 5.32%, 서울은 14.17%로 전년 대비 각각 0.3%포인트, 3.98%포인트 인상했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 폭은 12년 만에 최대 폭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30%에 육박하는 단지도 속출했다.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모두 21만9862가구로 전년(14만8077가구) 대비 56.1% 급증했다.

이에 따라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도 커졌다.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의 예정 공시가격(동·호수별상이)은 10억800만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9억1200만원) 대비 10.5%(9600만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 너무 급격합니다.
[발행일자: 2019-03-17] [발행매장: 2019-04-16] [발행인원: 6]

이번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비해 무려 35%나 올랐습니다. 최근 2년간을 계산하면 53%가 올랐구요. 2011년에서 2017년까지 7년간 ...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맞는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요런데 정부의 부동산 가격 정상화 조치에 대해 전면적으로 HOME - 국민소송권 - 국민청원 및 제안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엉터리로 올리고 있어 화가 납니다. 꼭! 다시 재검정 해주세요.
[발행일자: 2019-03-17] [발행매장: 2019-04-16] [발행인원: 4]

저는 광동구 일산동 신시원아파트 전용면적 59.64 제곱미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고 국토부세외에 확인해 보니 전용면적 72.02 제곱미터도 그동안 공시가격이 높게 산정되어 있더라고요. 세에 할 송수금 하던게 아니라더라고요. 이런 건... 계산방법이요? 더 자세한 설명도 알려주세요. 국토부에서 HOME - 국민소송권 - 국민청원 및 제안

1가구 20년이상 소유자는 종부세 폐지 청원 및 공시 가격 제 조정 요청
[발행일자: 2019-03-17] [발행매장: 2019-04-16] [발행인원: 2]

1주택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폐지 및 집값은 내려가고 매매도 안되는데 공시 가격도 계속해서 엄청나게 강행적으로 올리는 세금 소득 정권은 국민적 저항 앞에 좌초될 줄라게 될 것이라 추측이 다시 살펴보고 바로 집어 주시길 바라며 고백 한세 시는 사정들은 세금 1월도 안내고 대출받아 할 안 사정들은 안 보 HOME - 국민소송권 - 국민청원 및 제안

정부가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을 발표한 지난 14일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공시가격 인상안 조정 요청 관련 청원을 캡처. /채신화 기자

원) 올랐다. 부동산정보센터에서 단순 계산해본 결과, 이 경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266만6592원에서 올해 326만3328원 22.4% (59만6736원) 인상된다.

그러자 주택 보유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시가격 인상에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4일 공시가격 인상안이 발표된 이후 이를 조정 요청하는 청원글이 20건 가까이 게시됐다. 한 청원자는 “공시가격 인상이 너무 급격하

다. 적어도 1주택자에 대한 예외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공시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은퇴자의 경우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며 공시가격 인상을 조정을 요청했다.

공시가격 의견서 제출도 잇따르고 있다. 각종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조세 저항을 위해 ‘공시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자’는 글 또는 후기글 등이 다수 게재됐다.

<3면에 계속>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 ‘2019 100세 플러스 포럼’ ‘풍족한 노후’ 재테크 토크쇼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8일(목) ‘2019 100세 플러스 포럼’을 개최합니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 분위기 속에서도 국내의 경제는 올해도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 터널이 길어지면서 경기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100세시대 재테크 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장수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테크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에선 ‘재테크 토크쇼’를 통해 주식과 부동산 재테크 전략, 은퇴와 재테크에 대해 토론합니다. 불확실성 시대의 주식 투자전략과 다양한 규제 속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치투자’로 유명한 존리 매리츠자산운용 대표·이재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 폭부러진 부동산 투자자문으로 유명한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 등이 알토티란 같은 강연을 펼칩니다.

이날 ‘100세 플러스 포럼-재테크 토크쇼’에서 재테크 전략을 찾길 기대합니다.

행사명 : 2019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
주 제 : 100세시대 재테크 전략
일 시 : 3월 28일(목) 08:30~13:00
(VIP 티타임 08:30~08:55)
장 소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지하 1층 그랜드홀 문의 및 참가 신청 :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주 최 : 메트로신문



광화문 광장 떠나는 세월호 천막. 지난 2014년 7월 14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추모 천막이 4년 8개월 만인 18일 오전 철거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리베이트 제공’ 동아ST에 급여정지, 법원이 제동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내달 5일까지 잠정 인용 폐지된 법령 적용 논란도



동아에스티(ST)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이 하루만에 효력정지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동아ST의 약품 87개 품목에 2개월간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린데 대해, 동아ST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곧바로 인용한 것이다. 법원이 이처럼 빠르게 대응한 것은, 그만큼 행정처분이 기업에 미칠 손해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처분이 적절하지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아ST에 최소 380억원 손해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15일 오후 동아ST가 제기한 요양급여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지 반나절 만이다. 복지부는 동아ST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지난 15일 동아ST의 간염 치료제 ‘헵세비어정’ 등 87개

품목에 2개월간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했다. 138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동아ST의 처벌대상 약제 품목들에 대한 급여정지는 4월 5일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한숨 돌린 동아ST는 행정소송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는 오는 22일 시작된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심리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원은 회사 측이 입을 막대한 손해를 입던 막기 위해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처분의 가혹함을 인정했다고 판단한다면 향후

심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내린 87개 품목의 급여 정지 기간은 오는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2개월의 급여 정지는 사실상 87개 품목의 시장 퇴출이라고 보고 있다. 보험 급여가 정지되면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대체약이 있는 한 굳이 비급여 약품을 처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급여 정지된 의약품들은 의료기관의 처방목록에서 빠지게 되고, 한번 제외된 의약품은 다시 되돌아가기 어렵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이번에 급여가 정지된 87개 품목은, 동아ST 전체

품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동아ST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결정되면 당장 입게되는 피해는 38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그 이후에 얼마만큼 심각한 피해가 이어질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380억원은 지난 한해 동아ST가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394억원)과 맞먹는다. ◆행정처분은 과연 적절한가 복지부는 이번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이번 행정처분에는 지난해 폐지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다시 적용되면서 우려를 키웠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됐다. 리

베이트 적발 시 최대 1년간 급여정지, 5년 이내 재적발시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아예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많은 허점을 드러냈고, 결국 4년 만인 지난 2018년 최초 발의자인 남 의원이 스스로 폐지하면서 리베이트 규제는 기존 ‘약가인하연동제’로 되돌아갔다. 복지부가 이번 행정처분에 폐지된 법안을 굳이 적용한 이유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점이 2009년~2017년이기 때문이다. 법체계가 법령이 개정된 2018년 9월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이번 행정처분이 시행될 경우, 투아웃제의 폐해가 반복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lee@